

목차

서장	1. 2012년과 남북관계	5
	2. 2012년 조사시점과 그 의의	7
	3. 조사목적	9
	4.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12
제1부 기초분석	I. 통일에 대한 인식	19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20
	2. 통일의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25
	3. 통일에 대한 기대	28
	4. 통일과 민주주의	35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39
	6. 소결	42
	II. 북한에 대한 인식	44
	1. 북한의 존재 인식	45
	2. 북한의 변화와 안정성에 대한 인식	50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53
	4. 북한위기의식	58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62
	6. 소결	66

III.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69
1. 대북정책 분야별 통일에 대한 기여도	70
2.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77
3.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발표 신뢰도	82
4. 소결	85
I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88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90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91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99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역할 및 정책에 대한 태도	101
5. 소결	108
V.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112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113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23
3. 주변국 국가이미지	131
4. 중국에 대한 의식과 태도 변화	135
5. 소결	142

제2부 심층분석	I.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의 관계	147
	1. 서론	147
	2.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149
	3.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	160
	4. 민족주의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166
	5. 정치적 성향과 다문화 및 북한출신주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168
	6. 다문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	178
	7. 결론	180
	II. 남남갈등의 변화와 지속	182
	1. 서론	182
	2.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184
	3. 통일 인식	192
	4.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201
	5. 결론	204

III.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206
1. 서론	206
2.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208
3.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218
4. 북한 주민인권 개선과 핵문제에 대한 인식	232
5. 결론	241

결장

1. 통일인식: 목적으로서의 통일과 수단으로서의 통일의 공존	248
2. 북한인식: 적대의식과 공존의식의 긴장	250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다문화적 시선과 민족적 관점	253
4. 대북정책: 유연한 현실주의	256
5. 주변국 인식: 실용적인 국제주의	258
6. 남남갈등과 사회통합: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260

부록

1. 응답자	265
2. 결과집계표	268
3. 설문지	367

표목차

[표 1-Ⅱ-1]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포기하지 않을 것’)	57
[표 1-Ⅲ-1]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72
[표 1-Ⅲ-2]	남북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지역별)	73
[표 1-Ⅲ-3]	남북 정기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74
[표 1-Ⅲ-4]	남북 정기 회담과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지역별)	75
[표 1-Ⅲ-5]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76
[표 1-Ⅲ-6]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세대별, 지역별)	77
[표 1-Ⅲ-7]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	82
[표 1-V-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114
[표 1-V-2]	주변국가에 대한 친밀도: 성별분석	115
[표 1-V-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23
[표 1-V-4]	주변국가의 위협도: 성별 분석	124
[표 1-V-5]	연령별 대미 위협도	125
[표 1-V-6]	연령별 대중위협도	127
[표 1-V-7]	연령별 대북위협도	129
[표 1-V-8]	천안함사건의 정부발표 신뢰도와 대중국위협도	136
[표 1-V-9]	북중 협력 강화에 인식	139
[표 1-V-10]	북중 협력 강화와 대중국위협도	140
[표 2-I-1]	다문화 지향성	150

[표 2- I -2]	다문화에 대한 우려	152
[표 2- I -3]	다문화 지향성과 다문화 우려의 교차분석	154
[표 2- I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156
[표 2- I -5]	북한이탈주민 한국 수용에 관한 의견	157
[표 2- I -6]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관한 의견	158
[표 2- I -7]	다문화 지향성과 새터민 친근감의 교차분석	160
[표 2- I -8]	다문화 지향성과 새터민 수용의 교차분석	161
[표 2- I -9]	다문화지향성과 새터민 지원강화의 교차분석	162
[표 2- I -10]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친근감의 교차분석	163
[표 2- I -11]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수용 교차분석	164
[표 2- I -12]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새터민 지원강화 교차분석	165
[표 2- I -13]	통일이유와 다문화에 대한 우려 교차분석	167
[표 2- I -14]	이념적 성향과 북한에 대한 태도관계 교차분석	169
[표 2- I -15]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 지향성 교차분석	170
[표 2- I -16]	이념적 성향과 다문화에 대한 우려 교차분석	171
[표 2- I -17]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다문화 지향성 교차분석	172
[표 2- I -18]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173
[표 2- I -19]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수용에 관한 견해 교차분석	174
[표 2- I -20]	정치적 성향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교차분석	175
[표 2- I -21]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교차분석	176
[표 2- I -22]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강화 의식 교차분석	176

2012 통일의식조사

[표 2-I-23] 북한에 대한 관용성과 탈북자(새터민)수용에 관한 견해 교차분석	177
[표 2-I-24] 다문화,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분석	178
[표 2-II-1]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186
[표 2-II-2] 세대, 이념 집단별 통일의 필요성 (2012)	195
[표 2-II-3] 통일이 필요한 이유: 연령 집단별 구분	196
[표 2-II-4] 통일이 필요한 이유: 이념 집단 간 구분	198
[표 2-II-5]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202
[표 2-III-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 정도	211
[표 2-III-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별 만족 정도	211
[표 2-III-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 정도	214
[표 2-III-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 정도	215
[표 2-III-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	216
[표 2-III-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 정도	218
[표 2-III-7] 연령대 및 지역별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220
[표 2-III-8]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223
[표 2-III-9] 대북 현안별 시급성 정도	224
[표 2-III-10]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229
[표 2-III-11]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중 우선순위	239
[표 2-III-12]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	240

그림목차

[그림 1-I-1]	통일의 필요성 여부	21
[그림 1-I-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23
[그림 1-I-3]	통일이 가능한 시기	27
[그림 1-I-4]	통일로 인한 이익의 기대감: 개인과 남한 사회	29
[그림 1-I-5]	이념 성향별 통일의 집합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32
[그림 1-I-6]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36
[그림 1-I-7]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38
[그림 1-I-8]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40
[그림 1-II-1]	북한의 존재 인식	45
[그림 1-II-2]	연령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47
[그림 1-II-3]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48
[그림 1-II-4]	대북 비판의식	51
[그림 1-II-5]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53
[그림 1-II-6]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55
[그림 1-II-7]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56
[그림 1-II-8]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59
[그림 1-II-9]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0
[그림 1-II-10]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1
[그림 1-II-11]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62
[그림 1-II-12]	북한사회 인지도	63
[그림 1-III-1]	대북정책 분야별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71
[그림 1-III-2]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78
[그림 1-III-3]	연령대별 대북지원 증대 인식 비율	79
[그림 1-III-4]	지역별 대북지원 증대 인식 비율	80

2012 통일의식조사

[그림 1-Ⅲ-5]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지지정당별 인식	81
[그림 1-Ⅲ-6]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	81
[그림 1-Ⅲ-7]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조사결과 신뢰도	83
[그림 1-Ⅳ-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90
[그림 1-Ⅳ-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이웃	93
[그림 1-Ⅳ-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직장동료	94
[그림 1-Ⅳ-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사업동업자	96
[그림 1-Ⅳ-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1)	98
[그림 1-Ⅳ-6]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2)	99
[그림 1-Ⅳ-7]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100
[그림 1-Ⅳ-8]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정도	102
[그림 1-Ⅳ-9]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	104
[그림 1-Ⅳ-10]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106
[그림 1-Ⅳ-11]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내 경쟁에 대한 견해	107
[그림 1-V-1]	연령별 대미친밀도	116
[그림 1-V-2]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117
[그림 1-V-3]	연령별 대중친밀도	119
[그림 1-V-4]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	120
[그림 1-V-5]	연령별 대북친밀도	121
[그림 1-V-6]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122
[그림 1-V-7]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126
[그림 1-V-8]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128

[그림 1-V-9]	정치이념별 대북위협도	130
[그림 1-V-10]	주변국가 이미지: 협력대상	131
[그림 1-V-11]	주변국가 이미지: 경계대상	133
[그림 1-V-12]	주변국가 이미지: 적대대상	134
[그림 1-V-13]	주변국가 이미지 경쟁대상	135
[그림 1-V-14]	천안함사건 정부발표 신뢰도와 남북관계 악화의 중국책임	137
[그림 1-V-15]	천안함사건 정부발표 불신과 남북관계 악화의 중국책임	138
[그림 1-V-16]	북중협력 우려와 남북관계 악화 중국책임	141
[그림 1-V-17]	북중협력 바람직함과 남북관계 악화 중국책임	141
[그림 2-II-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 미국, 북한	184
[그림 2-II-2]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	188
[그림 2-II-3]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	190
[그림 2-II-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이념집단별 응답	191
[그림 2-II-5]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193
[그림 2-II-6]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균열: 이차원 모델	199
[그림 2-III-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209
[그림 2-III-2]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서 국민의견 반영 정도	210
[그림 2-III-3]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정당별 만족 정도	212
[그림 2-III-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별 책임 정도	213

2012 통일의식조사

[그림 2-Ⅲ-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정도와 북중협력 강화	217
[그림 2-Ⅲ-6]	바람직한 차기정부 대북정책 방향	219
[그림 2-Ⅲ-7]	지지정당별 대북정책 만족 정도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 1	222
[그림 2-Ⅲ-8]	지지정당별 대북정책 만족 정도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 2	223
[그림 2-Ⅲ-9]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찬성 의견 비율	226
[그림 2-Ⅲ-10]	연령대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227
[그림 2-Ⅲ-11]	지역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227
[그림 2-Ⅲ-12]	지지정당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228
[그림 2-Ⅲ-13]	지지정당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 찬성 비율	230
[그림 2-Ⅲ-14]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 비율	230
[그림 2-Ⅲ-15]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지역별 찬성 비율	231
[그림 2-Ⅲ-16]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전 대화·교류 중단에 대한 지지정당별 찬성 비율	232
[그림 2-Ⅲ-17]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연령대별 비율	233
[그림 2-Ⅲ-18]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현안별 찬성 입장	234
[그림 2-Ⅲ-19]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235

[그림 2-Ⅲ-20] 북한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	236
[그림 2-Ⅲ-21]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평화공존	237
[그림 2-Ⅲ-22]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교류협력	238
[그림 2-Ⅲ-23]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239
[그림 2-Ⅲ-24] 북한의 핵무기 불포기 응답 중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	241

2012 통일외식조사

서 장



■ 서 장

2013년 남북한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다. 2012년 12월 19일 한국의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끝남으로써 러시아·중국·미국·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의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들이 일단락되었다.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 모두 2013년은 안팎의 변화하는 여건에 부응하여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제들을 다듬느라 분주할 수밖에 없다. 각 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와 중요한 쟁점들이 다르고 이해의 상충으로 서로 경쟁과 갈등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하여 북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서 북한문제의 비중이 더 커지고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수년간 매우 나빠진 남북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바람과 기대들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기술개발로 말미암은 정치·군사적 분쟁위험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핵개발을 빌미로 일본의 우경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어서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관련 사안이 동북아와 세계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김정일 사후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장악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돌파할 의미 있는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러 가지 점에서 2013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의미 있는 변화가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매년 북한,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 연구해 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2013년도의 변화는 주어진 조건,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정



부의 정책적 선택,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의식과 대북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관계의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다. 그중에는 한국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변수, 환경적 요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원리와 독특한 정책선택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한국정부나 한반도 주민이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전환이나 개선 여부가 한국정부의 정책선택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응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대응과 요구, 설득과 제안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한반도의 미래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줄 집합적 방향과 판단, 정책구상의 효과가 매우 크다. 이것은 단지 당위적인 주장이나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자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정책선택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식과 지향, 정책적 공감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일반이 지니는 의식의 방향이나 판단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도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이 조사는 2012년 7월에 실시된 것이어서 후반기의 변화를, 예컨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나 한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 및 남북관계, 대외관계, 통일 등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집합적 태도나 인식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가 향후 미칠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거의 동일한 항목으로 엄격한 조사방법에 입각한 종합적 의식자료를 얻음으로써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지향이 매년 어

땡게 달라져 오고 있는지 그 추세와 경향, 흐름을 포착해 오고 있다. 이런 실증적 자료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내는 현실적 유용성 못지않게 유동적인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패턴을 확인하는 이론적 작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가치와 제도,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세계, 정치와 경제 등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지향들의 결합양상, 심층적 가치체계와 집단정서를 확인하는 종합적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1. 2012년과 남북관계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김일성 주석의 뒤를 이어 2대세습자로서 북한을 통치해온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문제는 오랫동안 관심사였고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이 순조로울 것인지도 흥밋거리였다. 어릴 적 해외유학을 경험한 20대 말의 젊은 지도자가 북한의 현 체제논리를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과연 3대세습이라는 전대미문의 권력교체가 별문제 없이 정착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함도 컸다.

북한의 2012년은 김정은 체제가 자리 잡아가는 한 해였다. 연초에 김정은은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를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권력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4월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의 12기 5차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고 4월 15일에는 강한 어조로 대중연설을 통해 자신을 알렸다. 곧이어 4월 22일에는 4차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함으로써 명실공히 북한의 당, 정,



군을 통괄하는 최고지도자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보했다. 2012년 한해를 되돌아볼 때 김정은의 권력이양과정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의 대외관계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볼 때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미국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소위 ‘2.29합의’에 도달했지만 4월 13일 광명성 3호 1기를 발사함으로써 합의이행을 무산시켰고 다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발이라는 틀로 되돌아갔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4월 13일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핵화요구에 정면으로 맞섰다. 2012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12월 12일에는 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긴장을 조성하였다. 대남정책 역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면서 남한정부를 비난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2012년은 큰 전환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여파로 5.24조치가 내려졌고 그로 인해 남북경협과 각종 교류왕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력사업이 중단되거나 크게 위축되었다. 김정은 체제가 유연한 정책전환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 일부의 바람도 여전한 선군주의 주장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헌법개정의 소식 앞에서 힘을 잃었다. 경협당사자들을 비롯해서 5.24조치의 완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북한의 사과 없이 정책전환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란거리였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국내외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북한인권문제가 다시 국제적 관심을

받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국내 정치세력간 이견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점은 2012년에 탈북자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탈북자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제2하나원을 개소하기도 했지만 정작 탈북자의 숫자는 급감하였다. 이런 변화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북한이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탈북자에 대한 통제를 심화시킨 탓이지만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불만과 어려움이 일정 부분 피드백된 점도 있을 것이다. 2012년에는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 여러모로 탈북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2012년 조사시점과 그 의의

이 조사는 2012년 7월에 행해졌다. 이 시점에 영향을 미쳤을 몇 가지 점을 일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새해 초부터 진행된 북한의 김정은 체제구축과정이다. 앞서도 언급한 대로 김정은은 예상보다 빠르게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간 것으로 보이지만 7월의 시점은 여전히 3대세습자로서의 김정은의 지배체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유동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하여 전달된 북한 내부의 움직임과 대외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노동당의 제1비서직을 연이어 확보하고 태양절의 대중연설을 통해 김일성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권력자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에 못지않게 북한의 광명성 3호발사 의지표명과 발사,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2012년 3월 11일 4차 노동당 당대표자회, 2012년 3월 13일 제125기 15차 최고인민회의를 끝내고 태양절 전날인 2012년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을 선포했고, 국제사회의 압력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2년 4월 13일 발사를 감행했다. 2분 15초 만에 추락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인 과시욕망은 한풀 꺾였지만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개발의혹은 증폭되었다. 여기에 북한의 개정헌법이 핵보유국임을 천명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월 중순부터 발생한 중국내 탈북자 강제송환을 둘러싼 북한인권논란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4월 11일 총선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꾼 여당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의석인 152석을 얻었다. 이 총선의 과정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경협, NLL문제, 북한인권 등이 다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7월의 조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이 2012년도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해보려 한다.

첫 번째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으로의 체제전환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3대세습과 장거리 로켓발사, 핵개발의지, 대남비방 등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대북의식과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할 것이다. 이런 변화가 모두 김정은 효과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김정은 체제의 앞날을 고려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로 지난 5년 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태도와 인식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5.24조치는 2011년에 이어 2012년

에도 남북관계를 규율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반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의식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의식의 양면성, 이중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주목해 볼 것이다. 특히 과거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단선적이지 않은 다층적 의식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발견되던 현실주의적이면서 양면적인 태도가 여전히 유지되는지, 일정한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전쟁의 위기로 치닫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응 속에는 늘 모순적인 지향이 혼재하며 단호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강경책에는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미묘한 반응들이 존재한다. 군사적 응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군과 정부에 비난을 쏟아 부는 한편으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미연에 조치하는 정치적 노력이 부족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려 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태도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의식의 흐름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추적해 볼 것이다. 물론 이런 물음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답은 쉽지 않지만 진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을 확인해 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조사목적

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들의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심층적 평가와 재정립에 도움을 주려는 뜻이 있다. 남북관계는 2012년에 들어서도 전면적인 경색과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2010년도 이래의 긴장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잘 이해하게 된 상태이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반응, 평가를 읽어낼 수 있다. 2008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정부교체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었었지만,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로서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국민들의 정책적 지향을 보여 줄 개연성이 크다. 특히 민감한 대북인식, 통일의식, 대외인식 등은 국민들의 대북정책의 평가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런 변화가 말해주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적 조사는 앞으로도 그 의의가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조사연구가 보다 효율적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구현하고 추진하는 데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성원들의 의식적 흐름을 포착해 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다. 남북관계에서 국민의 의식이나 사고는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의하고 문제를 규정하며 미래를 창조적으로 구성해가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정책형성이나 평가를 위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장차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는 한국사회의 자기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한반도 통일은 지금까지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크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은 그 자체로 독립변수로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평면적 조사가 아닌, 종합적이면서도 시계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매년 상당한 공을 들여 이 조사를 수행하는 목적의 하나는 매년 달라지는 환경들에 반응하면서도 그 심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의식구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아직은 자료의 축적이 충분치 못하지만 지난 6년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비교됨으로써 일종의 한국인의 집합적 가치지향, 정체성의 동학, 집단정서와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 조사 작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종합적 비전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현 분단구조는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고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런 역사적 전환이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한국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예기치 못한 갈등과 문제들이 확산될 수 있고 심지어 최근의 상황이 보여주듯 무력충돌의 위험과 전쟁의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분쟁을 막고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반응과 개입방식,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역량, 남북관계의 특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판단, 집합적 의지일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남북한 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지와 가치지향이 갖는 중요성은 그 어떤 변수보다도 크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가능한 시기와 추진속도,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 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



체제 등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시계열별로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의 패턴, 정서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미래비전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조사는 일차적으로 실태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합의식의 구조와 그 지향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할 지적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보고서가 앞서 발간된 책자와 함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창의적인 미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4.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매년 7-8월 기간에 1회 실시되고 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해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에 일관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2012년 설문조사의 각 설문 문항도 기본적으로 이전 조사의 문항들을 변경하지 않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몇몇 문항을 첨가하거나 삭제하였으며, 이전 통일의식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문항의 경우엔 설문 문항의 내용이나 답지 구성 등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이번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부문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이다. 먼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부문)에서는 통일의 필요성

과 그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개별 대북정책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태도, 남북 관계 현안들의 시급성, 통일이 남한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 통일이 남북한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북한 정권의 신뢰성과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한 지식정보와 경험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 또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등도 조사되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우선 대북 지원 정책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북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 정책이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여론 반영도 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 금강산 관광의 재개문제, 대북 지원의 북핵연계, 대북 빼라 살포문제, 북한 인권문제,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과 교류협력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찬반 문항도 이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이다.

설문의 네 번째 부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친근감과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다. 이 밖에도 설문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대한 견해와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



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위상이 무엇이며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들이 있다. 또 이들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나 각국의 협력 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2011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북중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조사에 포함시켰다.

이상이 이 설문조사의 뼈대를 이루는 다섯 부분이다. 기초적 배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결혼 여부, 종교, 정치성향이 조사되어서 다양한 교차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통일의식과 관련지어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변수를 포함했는데,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질문과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이 질문들에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남한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 천안함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평가,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 차기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교차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부인 기초 분석에서는 위의 기본 다섯 설문 부문에 대한 기초적 기술 통계를 소개하는 한편 지난 6년간의 변화 추이를 소개하였고, 제2부인 심층 분석에서는 이 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종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더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분석적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그리고 부록에는 응답자 특성, 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설문지를 수록하여 다른 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2012년의 설문조사 결

과에 대한 분석과 요약뿐 아니라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의식이 변화하는 경향을 추적하기 위해 2007년 이래 6년간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2012년 통일의식조사는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26일간 실시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였다. 모두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된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pm 2.8\%$ 이다.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통계청의 2012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하고 난 후, 해당 층 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 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책임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갤럽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뽑힌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회의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꾀하였다. 또 면접원들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하에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12.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질문항목별 기본빈도(frequency)는 이 책의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를 포함하였다. 이외의 변수와의 교차분석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